



인터뷰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자

“대한민국 新성장축 구축...통합 성공, 결과로 증명할 것”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1일 공식 출범한다. 전국 최초로 2개의 광역자치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사례인 만큼 지역 균형발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선출된 민형배 당선자로부터 통합특별시의 비전과 시정 운영 방향,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구상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시민 여러분께 두렵고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기쁨보다 책임감이 먼저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를 이끌 초대 시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과는 민형배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제된 전남광주를 깨우고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통합의 길로 나아가려는 주권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 뜻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통합의 실질적인 내용을 채워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통합 과정의 갈등은 줄이고 시민들의 삶은 더 나아지게 해야 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낮은 곳에서, 더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320만 특별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난 경청투어와 선거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원도에서 16년째 전복 양식장을 하신다는 이장님은 수역원의 빛 이야기를 하며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사 버티는 것도 겁난다고 한숨짓던 소상공인들, 일자리 걱정에 밤잠 설친다는 청년들, 살림살이 팍팍해졌다고 하소연하시던 어르신들. 그 절박한 눈빛과 목소리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통합 이후 시민들이 체감할 내 삶의 변화다. 전남과 광주가 다시 힘을 모아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라는 시민 여러분의 명령을 받들겠다.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길 현안은?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통합 100일 긴급 실행 계획'에 서명하겠다. 출범 초기 100일은 통합특별시의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 시기다. 긴급 실행 계획에는 크게 4가지 핵심 과제를 담으려고 한다. 첫째, 어려운 민생과 체면치레 산업 현장을 직접 챙기는 경제위기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 둘째,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즉시 가동해 시민 참여가 보장된 투명한 행정을 시작하겠다. 셋째, 통합 출범 직후 불거질 수 있는 지역 간 이해 충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 넷째, 행정 조직 개편 로드맵을 확정해 새로운 통합 행정의 틀을 갖추겠다. 모든 일의 성패는 시작에 있다. 출범 100일, 흔들림 없이 달려겠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서로 신뢰를 쌓는 일이다. 전남과 광주는 오랫동안 같은 예산, 같은 사업을 놓고 경쟁해 왔다. 통합이 그 구도를 바꾸지 못하면 하나가 된다고 해도 내부 갈등만 커질 뿐이다. 저는 전남과 광주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역할을 나누는 동반자로 설계하겠다. 광주의 기술과 전남의 자원이 결합할 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의 아홉 경쟁력이 생긴다. 그 성과를 모든 권역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통합이다.

▲광주와 전남은 오랜 기간 행정구역이 분리된 채로 운영돼 왔는데 조직·인사·재정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 관리 방안은?

-통합 초기에 갈등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원칙은 하나다. 특혜도 배제도 없는 수평적 통합이다. 특히 재정에는 특별법에 명시된 불이익 배제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 균형발전기금을 운영해 부족한 지역에 재원이 자동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 갈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투명성이다.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 통합 과정의 갈등 관리 역할이 곧 통합특별시장의 역량을 증명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생각하고 한 치의 빈틈 없이 임하겠다.

▲통합특별시 청사 운영 원칙과 권역별 행정 기능 배분 구상은?

-청사 문제는 주청사를 어디로 할 것이냐가 아니라 3청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핵심이다. 위치보다 기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는 3청사를 순환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특별시장이 있는 곳이 곧 그날의 주청사다. 단, 전제가 있다. 어느 청사를 찾아가도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전제가 갖춰진 상태에서 일정 기간 순환 운영을 해보고 이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겠다.



1호 결재는 '통합 100일 긴급 실행 계획' 행정 의사결정 공개 시민주권정부 실현 공론조사·숙의민주주의장치 상설화 소통

통합발전특별회계 설치·교부세 비율 ↑ 20조원 특전 제도화...재정 안정성 확보 '재정 불이익 배제' 원칙도 철저히 준수

신뢰 속 모든 권역 함께 누릴 틀 만들어야 3청사 순환 근무...어디든 동일한 서비스 '균형발전기금'으로 광주 쏠림 우려 해소

인구 문제 해결 위한 '청년 정주 패키지' 동·서부·중남·광주권 연결 '경제공동체' AI·에너지·모빌리티·농생명 순환경제구축

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겠다.

▲정부 20조원 재정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4년 뒤에 끊겨버린다면 통합의 의미가 없다.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제가 강조하는 장치는 3가지다. 첫째, 특별법에 행정·재정 지원 강행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다.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원해야 한다'의 무화해야 한다. 둘째, 보통교부세 법정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다. 셋째, 통합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부액을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정치력도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원칙은 분명하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무리를 해서라도 호남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고도 직접 말씀하셨다. 청와대 재정지원 TF에 참여하는 각 부처장·차관들은 국회의원 시절 저와 함께 국정을 논했던 동료들이다. 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대통령의 의지가 실질적인 재원으로 현실화되도록 하겠다.

▲전남에서는 광주 쏠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균형발전 방안은?

-광주 쏠림 우려, 충분히 이해한다. 균형이 안 되면 이 통합은 안 하느니라 못하다. 첫째, 균형



프로필 ▲해남(65) ▲목포고·전남대·전남대대학원 졸업 ▲전남일보기자 ▲노무현 정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사회조정비서관 ▲제13·14대 광주광산구청장 ▲문재인 정부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제21·22대 국회의원

발전기금을 설치하겠다. 특별시 일반회계의 일정 비율을 자동 적립하고 인구감소지역·섬·농산어촌에 우선 배정하겠다. 자동 배분되는 제도로 균형을 실현하겠다. 둘째, 권역별 전략 기능을 분산 배치하겠다. 동부권은 국도남부권 신산업 전진기지, 서부권은 에너지 전환, 중남권은 농생명·K푸드, 광주권은 AI·미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각 권역이 저마다의 역할을 갖고 연결된다. 셋째, 통합의 본질은 광주가 커지는 데 있지 않다. 광주는 전남의 산업과 자원을 세계로 연결하는 플랫폼 도시가 돼야 한다. 전남이 성장해야 광주가 성장하고 전남의 시·군이 살아야 특별시가 완성된다.

▲AI·미래모빌리티·에너지·농수산업·관광 등 전남광주의 주력 산업을 어떻게 연계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인지.

-전남과 광주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다. 그 강점을 각 권역이 역할을 나눠 연결하는 것이 통합 성장 모델의 핵심이다. 광주권은 AI·R&D, 서부권은 에너지, 동부권은 철강·석유화학의 첨단 전환, 중남권은 K푸드다. 4개 권역이 하나로 연결될 때 전남광주는 비로소 완성된 경제 공동체가 된다. 전남의 에너지가 광주의 AI를 돌리고, 광주의 AI가 동부권 제조 공정과 전남 농업을 고도화하며, 그 성과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오는 순환형 경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일거리, 놀거리, 살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기존 지자체의 청년 정책들은 현금 지원, 이사비 지원, 각종 수당을 쏟아냈지만 청년 유출을 막지 못했다. 일자리와 성장 가능성, 주거 안정성, 도시의 미래 비전이 결합되지 않으면 청년은 지원금을 받고도 떠난다. 돈이 아니라 미래가 있어야 머문다. 저는 이를 '청년 정주 패키지'로 풀겠다. 일자리는 AI·에너지·모빌리티·바이오 등 전략산업과 직접 연결하겠다. 주거는 공공이 책임지겠다. 권역형 만원주택, 보증금 지원, 빈집 리모델링을 연계해 군 지역에서도 정착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 창업은 빈 점포와 빈집을 활용한 무상 공간과 즉시 시드자금 지원으로 도전의 문턱을 낮추겠다. 무엇보다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전환하겠다. 전남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도전의 기반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

▲통합 과정에서 시민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할 계획인지.

-통합특별시장으로서 제가 세운 첫 번째 공약은 시민주권정부다. 시민주권은 시민과의 소통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소통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제도로 가능하다. 가장 먼

저 할 일은 행정 의사 결정 과정을 시민 앞에 전면 공개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듯 통합특별시의 핵심 회의와 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겠다. 공개 만으로도 행정의 질이 달라지고 부조리가 줄어든다. 온라인 시민 참여플랫폼을 운영해 시민들이 24시간 언제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공론조사와 숙의민주주의의 장치를 상설화해 중요한 정책 결정은 시민이 직접 설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요한 것은 순서다. 정치인과 공무원이 결정하고 시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먼저 묻고 행정이 따라가는 방식으로 바꾸겠다.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임기를 마칠 때 시민들께서 '통합하길 잘했다'고 평가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려면 3가지가 실현돼야 한다. 기업과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시민이 성장의 이익을 직접 배당받는 도시,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 되는 도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은 전남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지역 균형발전의 첫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전남광주가 먼저 성공해야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도 따라올 수 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전남광주에서 처음으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초대 시장으로서 제가 반드시 해내야 할 역사적 책임이다. 설게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겠다.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 /번진기자